

광증합형레진 · 글래스아이노마시멘트, 2005년 완전 급여화 치협 “회원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강구중

광증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증합형글래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이 2005년 1월 1일부터 완전 급여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광증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증합형글래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MRI 등 3개 항목에 대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한다고 지난 12월 23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증합형복합레진충전과 광증합형글래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초음파, MRI 등 4개 항목에 대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비급여를 연장키로 결정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MRI 등에 대해 보험급여를 앞당겨 실시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를 적극 수용키로 하고 치협, 건보공단, 심평원 등 관련 단체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팀을 구성, MRI 등 보험급여시 건강보험 수가 수준, 급여기준,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광증합형복합레진충전, 광증합형글래스아이노마시멘트충전, MRI, 초음파 등 4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약 1조9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로 소요돼 보험료를 12.5%나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200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며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대로 초음파를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서라도 급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기영 보험이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규제개혁위원회서 번복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치협에서는 복지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등 적극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또 “치협에서는 이번 급여화 조치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며 “한시적 비급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최대한 유리하게 책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05년 부터 편입학 폐지 · 정원감축 치협 복지부에 전달

치협이 정원의 편입학 제도의 완전 폐지와 입학정원 10% 감축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안’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치협은 치의학전문대학원 출범시기인 2005년도 입학정원부터 이를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이번 치대 입학정원 감축안은 치과계 인력이 과잉공급 됨에 따라 입학정원을 감축해야만 한다는 치협의 주장이 의발특위에 서 관찰됨에 따라 가시화 된 것.

이에 의발특위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감축과 신·증설 불허 및 치과의료수요예측에 따른 치과 의사 공급정책 수립을 청와대에 정책건의했다.

또 복지부 구강보건과는 객관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의료인력 수요에 관한 연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 지난 10월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진흥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치과 의사는 2010년에 4천6백명, 2015년에는 7천9백명이 과잉공급되는 등 구강의료서비스 수요는 정체되는 반면 치과 의사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치협은 ‘치과 의사의 과잉공급’에 따른 진흥원의 객관적인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감축안을 작성 복지부에 전달한 것.

이번에 제출한 감축안에 따르면 치협은 일단 치과대학 재학생수가 현재 법정인원을 초과하고 있는 만큼 정원의 편입학 제도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의대 정원 감축시 시행하고 있는 방법으로 치대인 경우 지난 2002년 기준으로 입학정원의 10.7%가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학정원 10% 감축안과 관련 ▲전 치과대학의 일률적 10% 감축 ▲정원 40명 대학을 감축대상에서 제외하는 선택적 감축 ▲입학정원 대비 차등 감축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전 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일률적으로 10%로 감축하되 국립대학 및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대학이 먼저 해당 인원수를 감축해 나가는 방법적인 안도 거론됐다.

이병준 치무이사는 이번 감축안 제출과 관련 “치협은 감축되는 총 인원수에 비중을 두고 있다”고 피력하면서 “이번 감축안의 구체적 세부안은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간의 협의하에 결정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이사는 또 “각 대학별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학간 오해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끝까지 신중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까지 구강보건실 522곳 설치 정수장 100곳 수돗물 불소화사업도 / 복지부 하반기 사업 평가

오는 2010년까지 전국 522개의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운영된다. 또 노인의치 보철사업의 경우도 매년 5000명 이상 확대 실시되며, 전국 정수장 100개소에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03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평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구강병 예방사업 확대 장기목표로 2010년까지 구강보건실을 전국에 522개소를 설치한다. 설치 부문은 보건소 168곳, 초등학교 286곳, 특수학교 68곳이다. 또 노인의치 사업의 경우 2010년까지 매년 5000명 이상 확대 실시토록 하며, 치아홈메우기사업도 20만명씩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003년도 구강보건사업 추진 실적으로 초등학교 보건소 64곳에 구강보건실 설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전국 초등학교와 보건소에는 모두 273곳의

구강보건실이 설치돼 운영중이다. 또 전국 16개 보건소에 치과 이동진료용 차량이 지원됐으며, 전국 19만1201명에게 치아홈메우기사업 실시가 완료됐다.

아울러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노인 4353명(완전 의치 2762명, 부분의치 1591명)에게도 의치사업이 전개됐다.

복지부는 올해 구강보건사업 성과로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를 제공해 건강생활을 영위토록 지원하고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통해 치아우식증 예방에 적극 대처했으며 ▲구강보건실 설치를 늘려 지역주민들의 구강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미흡한 점으로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일부 반대론자들의 활동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개정...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경제특구 의협과 공조 개원가 피해 최소화

정재규 협회장은 지난 12월 26일 치과계 전문지 기자회견을 갖고 2004년도 회무 청사진을 밝혔다.

정 협회장은 올해의 주요 회무 목표로 ▲의료법 개정으로 건전한 의료 풍토 조성 ▲국제보건 의료발전재단 적극 참여 ▲복지부내 구강보건과 인원 확충 ▲동북아 덴탈 허브 존 육성 노력 ▲장애인 및 불우이웃 무료 봉사 사업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 노력 ▲경제특구 관련 의약계와 적극 공조 ▲치과 보조인력 계속적인 확충 ▲노인치과무료진료 사업 성공적 완료 등을 밝혔다.

정 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03년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치과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명실상부한 보건 의약계 리더단체로서 자리매김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정 협회장은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으로서 복지부 장관, 의협, 병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회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자주 열어 의로계 화합 등에 적극 나서고, 무료진료사업추진 등 대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 복지부나 의로계 단체 등이 치협을 대하는 것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수가와 관련 “불만족하는 일부 회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지나친 요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보험수가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의협이 수가인상과 관련해 강수를 뒀지만 치협은 다른 방법으로 정부에 요구, 치과계 실익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다”면서 “최근 보험수가와 관련해 각 지부회장들의 의견 수렴 결과 대체적으로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믿고 따라 온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일선회원들에게 고마움을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지난해 말 치협을 비롯한 의약계 단체가 입법 청원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 새로 구성될 제17대 국회에서 재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 협회장은 “극히 일부 회원

들 중에는 지나치게 많은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있고 동료치과의사가 정당하게 치료한 것도 잘못됐다고 환자에게 말하는 등의 윤리의식 실종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은 경우는 전체 치과사의를 욕먹이고 회원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행위인 만큼, 의로인 단체 중앙회에서 일부 자율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된 의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또 “치협은 국제 보건으로 발전재단에 적극 참여할 것이며, 재단 사업비 등을 통해 베트남 등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갖고 있는 개발도상국 등에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국제보건보건의료발전 재단과 관련 정 협회장은 “한국 치과의료 수준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화에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라며 “FDI 회장까지 배출한 한국치과계는 앞으로 해외진료 등 외국 진출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치과계 봉사 사업에 대해 “그 동안 치협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모범이 되는 단체가 스마일 재단”이라며 “장애인 사업 등을 통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은 기억을 되살려 불필요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장애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활성화 시켜 ‘더불어 사는 사회’, ‘국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치과계’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역설했다.

정 협회장은 올해에도 역시 국립 치의학 연구원 설립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피력했다. 정 협회장은 “한의협 같은 경우는 한의학 연구원이 있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해 치과계는 계속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 만큼, 올해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치과계 전문지에서 관심을 갖고 다뤄달라”고 말했다.

또 경제특구에 대해서는 “치협은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의협, 한의협 등과 공조를 통해 개원가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전력투구 하겠다”고 밝혔다.